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

의정단상



정다은
광주시의원

1980년 5월 광주에서 아픔으로부터 43년이 흘렀다. 그날 광주에서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이 오늘도 여전하다. 그와중에 특전사동지회는 군복과 군화 차림으로 오월영령들이 모셔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5·18단체는 갈라졌으며 민주정신의 계승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숨가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정당 후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당이 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5·18민주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국민적인 반발에도 소망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제43회 5·18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헌법수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는 새 교육과정에서 5·18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힘겹게 막아냈고, 극우성향 인사들의 잇따른 5·18에 대한 왜곡과 훼손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켜야 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월1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주정신 계승을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

록 개헌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개헌발의선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제22대 총선에 개헌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당·정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에 응원을 보낸다.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199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추진위원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광주항쟁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정부에 요구했고, 2008년 국회 헌법연구회는 개헌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제10차 헌법 개정안에는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수록해 민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23년에 이르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낀다.

필자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갖는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국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렇기에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독

재 세력조차도 '마치 민주적인 것'으로 보이는 제도를 도입해 독재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부당한 권력에 대항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역사인 5·18의 존재를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5·18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수호하고 계승하는 민주정신이 되어, 현재 역사왜곡처벌법까지 만들어 가며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5·18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과 명예훼손행위를 헌법과 괴행위로 명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5·18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반목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1980년 5월로부터 43년, 5·18은 각고의 노력 끝에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확고하게 내려졌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여·야의 이견도 없으며 국민적인 공감대 또한 형성되어 있다. 2023년 일반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8%가 5·18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수룩 작업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필자는 내년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5·18민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說

노란봉투법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 찾길

여당 반대 속 아는 '대화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편견 없는 토론'을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를 할 기회를 없애고 현장에 평화를 만들 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정치권이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다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의 우려처럼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등 사용자 범위도 넓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기업은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과 민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근본적인 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담겨진 법안 내용만큼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여·야는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편견 없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살피고 이견을 좁힌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물론이고 맹목적인 반대 또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회하면 늦는다

건어물 사재기 등 불안 고조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국민 불안을 가득 담은 신조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소금대란, 수산물 포비아, 패닉바잉...' 등이 그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정부를 비롯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당 신조어는 빠르게 퍼지며,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미 광주 양동시장 건어물 상가에는 연일 사재기성 구매가 증가하고 있었다. 건어물의 경우 미리 사놓으면 1~2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방사능 오염수가 장차 서남해안으로 밀려올 것으로 보여 미리 이것저것 구매하러 왔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어업현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수지역 한 어민은 "앞으로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을 거 같아 강제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2008년이

떠오른다.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 위험 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그리고 11일 뒤인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방영됐다. 보도의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여기에는 허위·과장 정보까지 포함)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규모 시위가 그 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속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사태는 겨우 일단락 됐다.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의 핵심이 된 촛불시위의 초석이 된다. 한번 뭉친 국민들이 그 힘을 활용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불안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오염수 파동'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알 수 없다. 허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1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사우디 하스·우라 특수부대(SFHU) 대원들이 연례 하즈(Hajj) 순례를 앞두고 열병식과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메카=AP/뉴시스

서석대



"나다. 신당 가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똥손다. 길게 바라." 2003년 11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어머니 진소임 여사가 이낙연에게 전화를 했다. 그 해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 동참했다. 이낙연에게 수차례 동참도 권유했다. '돈과 지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게 노 대통령의 뜻이었다. 하지만 이낙연은 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9석짜리 '꼬마 민주당'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학식도 논리도 아닌 '어머니의 심지'가 나를 민주당에 남게 했다." 2020년 서주원이 쓴 '이낙연의 길'에 나오는 이야기다.

영광에서 태어난 이낙연은 대표적인 흙수저였다. 집은 창고 같은 초가였고 농사 지을 땅도 '떼 밭'이 전부였다. 잔디가 심어진 아버지의 산소 주변에 밭을 만들어서 '떼 밭'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좁은 땅에서 이낙연의 어머니는 틈나는 대로 채소를 길러 매일 10km를 걸어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다. 겨울이면 계를 잡기 위해 고창 심원까지 왕복 50km를 걸어 다녔다고 한다. 그것을 아는 자식들도 버스비가 아까워 매일 학교를 걸어서 다녔다. '어머니의 괴력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는 게 이낙연의 회고다.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서도 가난은 마찬가지였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마저도 가난 때문에 그만 뒤야 했다. 홀어머니 아래, 고생하는 7남매의 생계를 돕는 것이 더 시급해서였다. 공부를 중단하고 법벌이에 나선 후에는 동아일보에서 21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며 후배들의 '술과 밥'을 책임졌다. 작고한 김태홍 전 의원(당시 한국일보 기자)과 참여정부 인사수석은 이낙연을 두고 '물건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생각과 행동이 제법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게다. 지리멸렬한 야당, 갈팡질팡하는 여당, 마음 둘 곳 없는 국민까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작금의 대한민�에서 '물건이 괜찮다'는 이낙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부 시절 정찬용 인사수석 등이 당시 어울렸던 '술 친구'였다.

1년간 미국에 머물던 이낙연 전 총리가 24일 귀국한다. 그동안 국내 정치와 거리를 뒀던 만큼 '전면 등장은 어려울 것'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메시지는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18살 고등학교 때 만나 50년 그와 함께 살았다는 정찬용 전 참여정부 인사수석은 이낙연을 두고 '물건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생각과 행동이 제법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게다. 지리멸렬한 야당, 갈팡질팡하는 여당, 마음 둘 곳 없는 국민까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작금의 대한민�에서 '물건이 괜찮다'는 이낙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